

# 「벼 재배면적 조정제」 철회 촉구 건의안

[서춘경 의원 대표 발의]

의안 번호	259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2.

발 의 자 : 서춘경, 심민섭, 오원석,  
차상현, 나철원, 김연수,  
최미화 의원(7명)

## 1. 주 문

○ “붙임과 같음”

## 2. 제안이유

- 2024년 12월 정부는 ‘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’에 따라 벼 재배 면적 감축으로 쌀가격 안정을 목표로 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힘.
- 이에, 단기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통제방식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 기반한 자율과 지원에 바탕을 둔 단계적 방식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여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‘벼 재배면적 조정제’ 철회

#### 4. 참고사항

- 건의안 : 붙임
- 송부처 : 대통령비서실, 국회의장, 기획재정부장관,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 
전국시군구의회, 전국 시군구

# 「벼 재배면적 조정제」 철회 촉구 건의안

2024년 12월 정부는 ‘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’에 따라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가격 안정을 목표로 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.

하지만 정부는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번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으며, 면적 감축이 부진한 지자체는 공공비축미를 차등 감축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.

이는 농민들의 기본적인 영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, 자율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다.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벼 재배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농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으며, 타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 또한 생산, 유통, 판로 확보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민들의 피해만 더 가중될 뿐이다.

또한, 2024년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은 69만 8천ha로 이미 전년 대비 1.5% 감소했고, 여기서 추가로 8만ha를 더 감축한다면 이는 전체 재배면적의 13%에 해당하는 규모로 수입쌀에 대한

정책은 수립하지 않고 식량주권을 외면한 채 쌀 과잉생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농민의 탓으로만 돌리고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밖에 할 수 없으며, 결과적으로 쌀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.

정부는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단기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통제방식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 기반한 자율과 지원에 바탕을 둔 단계적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.

이에 우리 장성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.

하나. 정부는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라!

하나. 정부는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보장하는 쌀가격 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!

2025. 3. 7.

**장성군의회 의원 일동**